



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

- 3.7(목)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
- 국무조정실 주관 「해외직구 종합대책 TF」 구성, 향후 종합대책 발표 추진

- 정부는 3월 7일(목)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* 참석 : 국무조정실장(주재), 산업부, 중기부, 공정위, 관세청 등
 -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, 소비자 피해 상황,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, 대책을 논의하였다.
-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, 국무조정실 주관 「해외직구 종합대책 TF」(팀장: 국무2차장)를 구성하기로 하였다.
 - 앞으로 「해외직구 종합대책 TF」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, ①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② 소비자 불만·불편 사항 해소 ③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,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장	우향제 (044-200-2211)
	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김동빈 (044-200-2212)